

저임금 고용의 실태분석

정 성 미*

I. 머리말

최근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가 크게 확대되는 취업자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소득불평등, 이에 따른 빈곤의 심화가 문제화 되어 언제나 뜨거운 감자로 올라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근로빈곤층인 저임금근로자의 문제는 노동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저임금 고용은 여성이나 고령층 그리고 저학력과 같은 취약계층에 몰려 있다. 또 저임금 경험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실업과 비경제활동과 같은 미취업에서의 이동이 활발하며, 여성이나 고령층의 경우 저임금 탈출이 어렵고, 일자리의 질이 낮을 수록 저임금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자들이 대체로 합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 이후 저임금 고용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II장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규모 및 구성을 살펴본 뒤, 제III장에서 특성별 저임금 고용 비중의 변화를 분석하도록 한다. 제IV장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떤 특성들이 저임금 고용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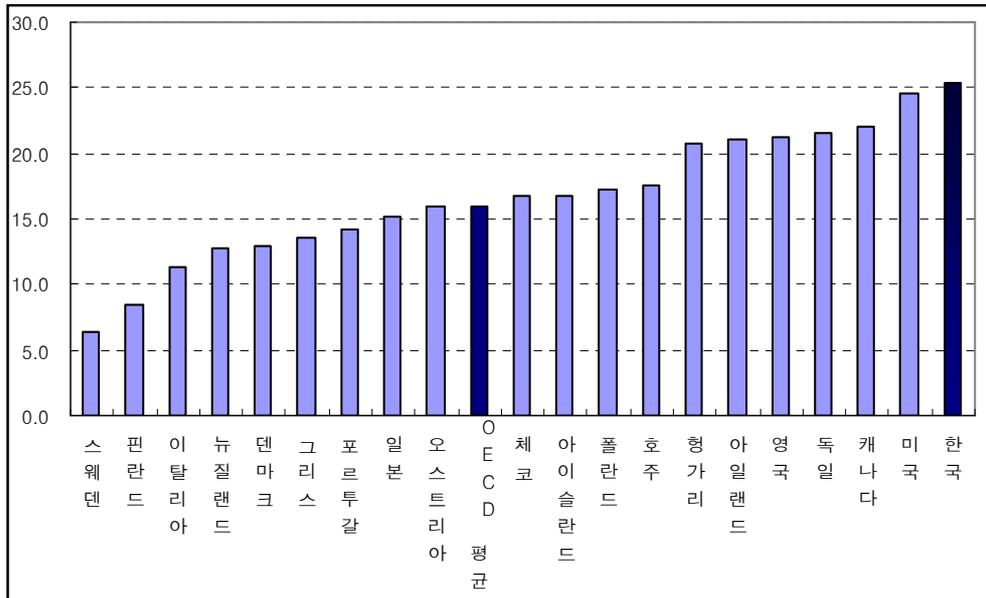
II. 저임금근로자의 규모 및 구성

전일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08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mjung@kli.re.kr).

[그림 1] OECD 국가의 저임금 비중(2008)

(단위: %)



: 저임금 (full-time wage earners) 임금 중위임금의 2/3
 : OECD(2010), *OECD Employmen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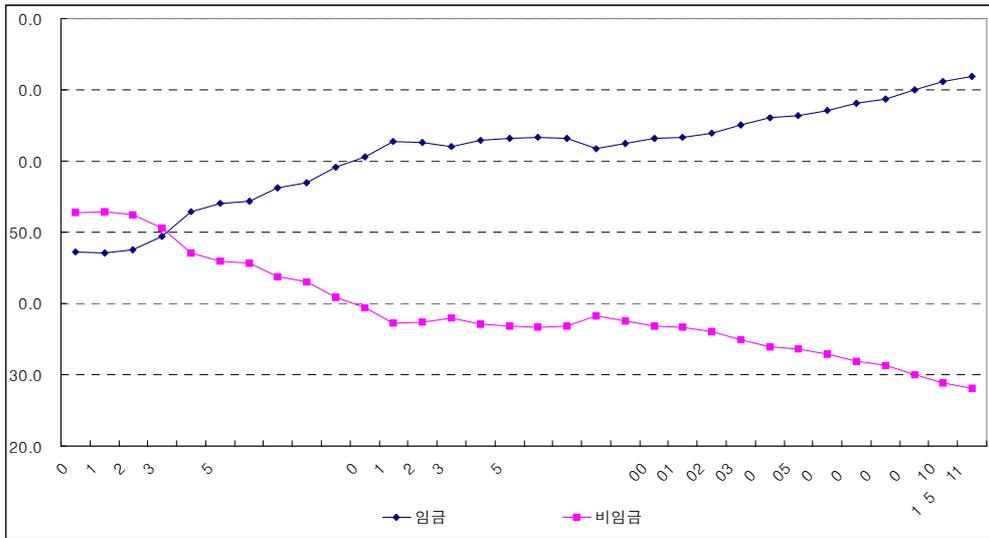
년 25.4%로 이용가능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1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의 국가의 저임금 고용의 비중은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국가들에서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복지정책은 우리와 다르고, 이들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의 여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1년(1~5월 평균)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1.8%로 우리나라의 취업자 구성이 임금근로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1980년대 초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던 임금근로자는 199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취업자의 60%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후 10여 년 가까이 60%를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다가 2000년 들어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임금근로자 증가추세가 꾸준히 지속되어 2010년에는 취업자의 70%를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자영업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 취업자 구조가 임금근로로 크게 변했다고 볼 수 있다.

임금근로자는 사실상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으며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생활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깊다. 또한 임금근로자들의 사회보험과 기업복지 등은 삶의 질과도 연

[그림 2] 중임금 비임금 의 비중

(단위: %)



: , KOSIS.

관이 깊는데, 저임금근로자는 소득이 낮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이 단절될 가능성도 높아 소득유지가 어렵다. 사실상 저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낮은 곳에 몰려 있어 근로빈곤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다.

저임금 고용에 관한 정의는 크게 보아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개념은 일정한 절대임금 수준을 정하고 그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고용으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상대적 개념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분포상의 일정 수준을 정하고 그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고용으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개념 방식을 이용한 OECD에서 인용하는 중위임금의 2/3 미만자를 저임금근로자로 정의하고 저임금 고용의 규모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사용하는 임금변수는 매년 3월과 8월에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의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을 이용한다. 노동시간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 변수를 이용해 월평균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표 1>은 세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소득 지위별 분포를 보이고 있다. OECD 보고서에 인용되는 저임금과 상대 빈곤, 상대 고소득을 구하는 방식을 이용해 중위임금의 1/2 미만을 받는 초저임금과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그리고 중위임금의 3/2 초과를 받는 고임금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3월 초저임금 고용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1.5%, 저임금 고용은 임금근로자의 24.0%, 중간임금은 47.2%, 고임금

< 1> 임금 임금 위

(단위: %)

	저임금	저임금	중 임금	임금
2002. 8	9.0	23.2	50.7	26.0
2003. 8	10.9	24.1	47.6	28.2
2004. 8	12.2	26.3	46.0	27.7
2005. 8	12.0	26.6	44.3	29.1
2006. 8	12.5	25.8	47.8	26.4
2007. 3	11.0	23.3	48.2	28.6
2007. 8	12.5	27.4	44.5	28.1
2008. 3	11.8	26.7	44.0	29.3
2008. 8	10.9	26.0	47.7	26.3
2009. 3	10.7	25.6	47.3	27.1
2009. 8	12.4	26.2	46.2	27.6
2010. 3	12.9	26.5	45.1	28.3
2010. 8	12.5	26.3	46.3	27.4
2011. 3	11.5	24.0	47.2	28.7

1) 2007 3 8 의
 2) 중위임금의 1/2 저임금, 중위임금의 2/3 저임금, 중위임금의 3/2 임금 의.
 3) 임금 비 비중임.
 : 「 가 」, 3 , 8 .

은 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저임금 고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지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저임금 고용의 비중은 2006년 이후 감소하여 2007년 3월은 2002년의 수준에 가깝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7년 8월 저임금 고용 비중이 크게 증가한 이후 다소 기복이 있지만 26% 수준에서 대체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1년 3월 감소했다. 그렇지만, 자영업이 감소하고 임금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저임금 고용의 비중이 꾸준히 25%가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1년 3월 현재 저임금근로자는 4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2011년 3월 시간당 중위임금은 8,630원이며, 초저임금은 시간당 4,315원 미만이고, 저임금은 시간당 5,753원 미만이다. 그리고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이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은 근로빈곤층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1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성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는 실직하더라도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저임금 함정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이병희, 2008).

III. 2002년 이후 특성별 저임금 고용의 특징

분포에 대한 특별한 가정 없이 데이터만을 이용해 해당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하는 커널분포추정¹⁾을 이용해 각 연도별 시간당 임금에 자연로그를 취한 시간당 임금의 분포를 [그림 3]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의 높이가 높고 좁을수록 불평등도가 낮은 것이고, 그래프의 높이가 낮고 옆으로 퍼져 있을수록 불평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프의 가운데 줄은 중위임금 값을 나타내고 있다.

2002년 그래프는 높이가 6에 가깝고 비교적 가운데 몰려 있는데 반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월은 높이가 5에 미치지 못하고 조금 더 넓어져 좀 더 불평등해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3월 현재 그래프의 폭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이는 2002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2002년 이후 시간당 임금으로 본 불평등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소득 지니계수는 2002년 8월 0.346에서 2010년 8월 0.357로 증가해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반정호, 2011).

<표 2>에는 2002년 이후 저임금 고용의 구성변화를 시기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2002년에 비해 남성 저임금 비중은 12.9%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15%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저임금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저임금 고용 비중은 남성의 두 배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여성 저임금 고용 비중이 높은 트렌드는 바뀌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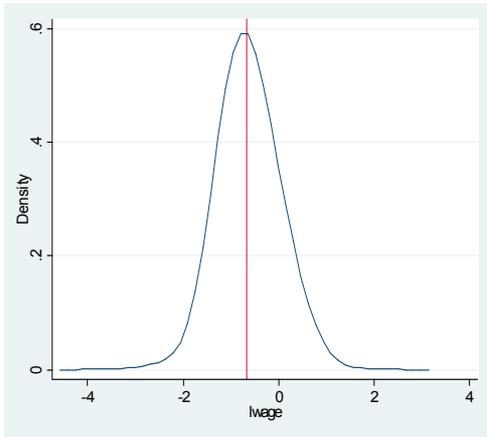
가구주의 경우 2002년 14.7%에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18%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 저임금 고용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영향은 역시 고졸 이하 저학력에서 저임금 비중이 많이 늘어났지만,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고학력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령별 저임금 비중 변화를 보면 저연령과 고연령에 저임금 고용이 몰려 있는 양상은 시기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다. 또 10대를 제외하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종사상 지위로 나누었을 때,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상용직에서 저임금 고용이 차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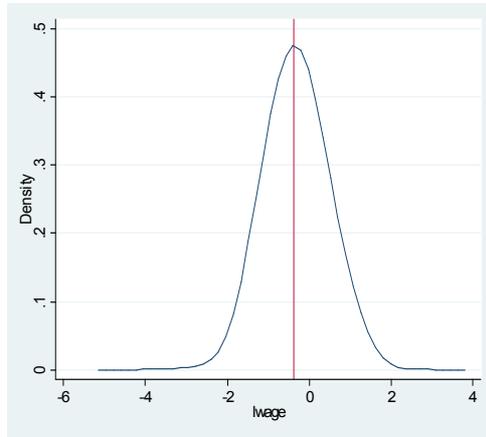
1) 비모수적 추정방법으로 Epanechnikov 함수인 $K(u) = \frac{3}{4}(1-u^2)1_{(|u| \leq 1)}$ 을 이용하였으며, 커널의 폭(width)은 0.5로 하였다.

[그림 3]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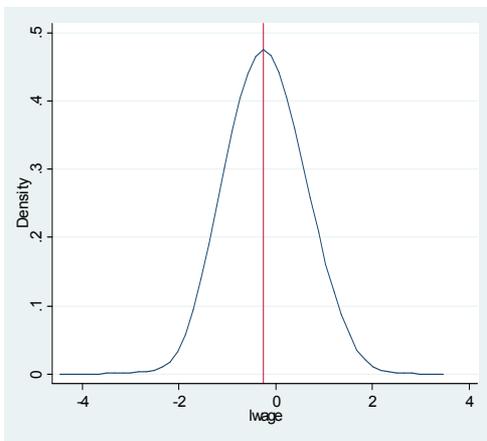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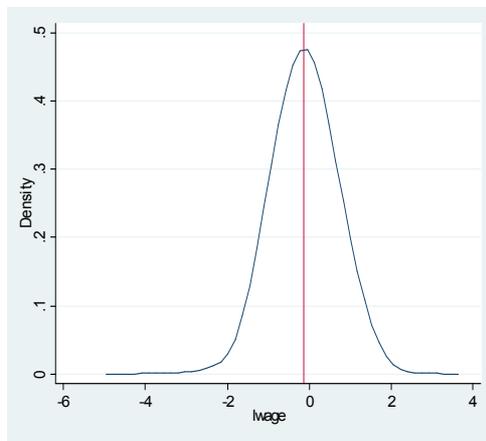
[2002 8]



[2007 3]



[2009 3]



[2011 3]

: 「 가 」, 3, 8 .

비중은 10% 미만의 적은 수준이지만, 상용직 자체가 2000년 이후 크게 늘어났음을 감안해야 한다. 저임금근로자 내부에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4%에서 2011년 3월 22%로 구성이 변화해 상용직에서의 저임금 고용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저임금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해 고용이 불안정한 곳의 저임금 고용 비중이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1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비중이 40%를 하회하는 높은 수준인데, 저임금근로자의 60% 이상이 1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다. 또한 초저임금의 경우 70% 이상이 10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에 몰려 있다.

< 2> 저임금 의

(단위: %)

		2002. 8	2005. 8	2007. 3	2009. 3	2011. 3		
저임금		23.2	26.6	23.3	25.6	24.0		
가	가	12.9	15.6	14.0	15.7	15.0		
		38.1	41.7	36.0	39.2	36.3		
		14.7	18.9	18.0	20.0	18.0		
		41.2	42.9	38.2	40.1	37.0		
가	가	28.4	32.0	23.5	26.8	26.9		
		9.0	12.1	12.2	13.4	12.0		
		32.6	36.5	30.3	44.6	39.6		
가	가	24.9	28.0	20.5	24.0	25.0		
		39.8	46.0	41.8	48.0	43.4		
		41.6	43.1	38.4	40.0	36.9		
중	중	31.9	35.9	26.4	29.5	28.7		
		44.8	54.8	51.8	58.7	54.7		
		24.6	30.2	26.3	30.3	29.8		
		13.1	16.6	14.3	14.1	13.0		
가	가	4.2	5.9	5.1	6.3	6.0		
		15~19	69.1	74.1	67.0	73.1	76.3	
		20~29	21.8	25.6	19.3	22.1	22.0	
		30~39	14.1	16.5	14.3	14.3	12.2	
		40~49	21.5	24.3	22.1	24.5	20.4	
		50~59	30.3	34.4	30.9	34.0	30.3	
위	위	60	61.1	65.6	62.1	67.0	66.0	
		임	6.8	8.5	7.5	7.4	8.8	
			34.6	41.9	37.3	44.4	44.5	
			47.7	58.4	52.0	63.1	60.4	
		비	비	18.8	19.4	17.1	17.8	16.6
				35.0	39.1	33.9	41.1	38.7
1~4	43.5			51.0	45.6	52.8	49.7	
가	가	5~9	26.7	34.5	30.0	35.9	32.6	
		10~29	21.0	24.7	22.0	22.9	22.5	
		30~99	15.9	17.5	14.0	14.8	13.8	
		100	9.0	8.9	6.6	6.6	6.6	

: 1) 2007 3 8 의 .
 2) 임금 비 비중임.
 : , 「 가 」, , 3 , 8 .

임금근로자는 사실상 임금소득 의존도가 높으며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생활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깊다. 무엇보다도 임금근로자들의 사회보험과 기업복지 등은 삶의 질과도 연관이 있다. 상대적으로 영세기업의 경우 기업복지 측면이 약할 수밖에 없고, 저임금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단절될 경우 소득유지가 어려워 복지수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저임금 기준을 상대임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저임금근로 비중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트렌드는 없더라도 근로조건의 변화는 차이가 날 수 있다. <표 3>은 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의 복지 수혜율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2002년 50% 내외의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65%가 넘는 수준에 있다. 반면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은 30% 내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2002년 20.0%에서 2005년 27.4%로 증가했지만 2011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접근이 용이한 고용보험의 경우 저임금근로자에게 적절한 정책을 사용하기에 너무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 3> 임금 저임금 의

(단위: , %)

		2002. 8	2005. 8	2007. 3	2009. 3	2011. 3
임금	국 금	52.7	61.4	62.6	64.9	65.7
		55.5	61.9	63.9	66.6	68.6
		48.0	53.1	55.6	57.9	65.3
	금	48.7	54.1	55.9	62.2	65.2
	금	48.5	52.1	55.5	57.8	65.4
		39.3	43.6	43.2	43.1	44.4
		-	-	28.9	30.8	35.4
저임금	국 금	20.0	27.4	27.4	27.4	27.4
		23.6	28.9	31.4	31.6	33.9
		21.5	26.2	27.4	29.1	33.1
	금	15.2	18.4	20.5	24.8	28.2
	금	14.8	15.8	19.5	18.2	29.7
		11.4	12.8	13.3	10.0	13.4
		-	-	10.4	12.3	15.3

1) 국 금 가 .
 2) 2011. 3 가 , , 국 비 가 : , 「 가 」, , 3 , 8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영향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기업복지 수혜율은 사회보험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중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35% 내외인 반면, 저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낮은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수혜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IV. 저임금 고용의 경향은 어떻게 변했나?

이 장에서는 2002년 이후 10여 년이 지난 2011년에는 어떤 집단에서 저임금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졌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에는 2002년 8월에서 2011년 3월, 2007년 3월에서 2011년 3월의 저임금 고용가능성의 변화를 비교하여 각각 저임금 고용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는지를 확인한다.

회귀분석을 위해 비교가 되는 두 개 연도의 원자료를 합쳐서 각각 추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저임금 여부를 저임금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인 이항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에는 성(남성 기준), 가구주(가구주 기준), 연령(50대 기준), 학력(중졸 이하 기준), 사업체 규모(300인 이상 규모 기준)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고용형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상 지위인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을 교차변수로 만들어 정규직이면서 상용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도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에 연도더미를 넣은 교차항을 넣어 활용하였다. 분석에는 모든 변수가 들어가지만 연도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차항만 보고하였다.

먼저 2002년 8월에서 2011년 3월의 이동을 보면, 2002년에서 10여 년이 지난 현재 남성의 저임금 고용의 가능성이 여성에 비해 높아졌으며, 가구주인 경우 비가구주에 비해 저임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정규상용직에 대비한 정규임시직과 정규일용직의 저임금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값을 얻은 반면, 비정규상용직, 비정규임시직, 비정규일용직은 기준변수에 비해 저임금 가능성이 각각 13%, 11%, 14% 정도 높아졌고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50대에 비해 20대, 30대, 40대에서 저임금 고용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한편, 학력효과는 중졸 이하에 비해 전문대졸의 저임금 고용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적 유의성도 높았다. 반면 고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사업체 규모로 본 결과 30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30인 미만 사업체의 저임금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002년에 비해 높아졌지만, 3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

그렇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과 2011년 3월은 어떻게 변했을까? 2002년에서 2011년을 비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에서 저임금 고용의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가구주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상용직에 비해 정규임시직의 저임금 고용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2002년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상용직, 비정규임시직, 비정규일용직의 저임금 고용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효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0대에 비해 20대의 저임금 고용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온 반면, 다른 연령의 통계적 유의성은 얻지 못했다. 사업체 규모에서 5~9인의 저임금 고용가능성이 높아진 것 외에는 다른 사업체 규모와 학력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저임금 가

		2002. 8 → 2011. 3		2007. 3 → 2011. 3	
			p		p
(=1)		0.031	0.001	0.027	0.003
가 (가 =1)		0.026	0.008	-0.015	0.113
·임 · 비 · 비 ·임 비 ·		0.059	0.311	0.061	0.000
		0.027	0.648	-0.021	0.522
		0.137	0.000	0.019	0.045
		0.117	0.001	0.041	0.002
		0.144	0.000	0.061	0.000
15 ~ 19 20 ~ 29 30 ~ 39 40 ~ 49 60		0.044	0.224	0.052	0.204
		0.042	0.006	0.035	0.015
		0.027	0.034	0.007	0.554
		0.029	0.025	0.018	0.137
		0.005	0.825	0.026	0.175
		-0.024	0.074	0.009	0.528
		-0.038	0.018	-0.013	0.420
		-0.032	0.020	0.003	0.843
1 ~ 4 5 ~ 9 10 ~ 29 30 ~ 99 100 ~ 299		0.045	0.002	0.016	0.234
		0.057	0.000	0.025	0.027
		0.020	0.048	-0.001	0.952
		0.001	0.952	0.002	0.787
		0.000	0.965	0.008	0.424
		0.429	0.000	0.341	0.000

: 「 가 」 , 3 , 8 .

V. 맺음말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몇 가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에 몰려 있는 저임금 고용은 2002년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여성과 고령층, 저학력과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사실상 임금소득 의존도가 높은 저임금근로자는 2011년 3월 현재 410만 명이 넘어 전체 임금근로자의 1/4에 해당하는 수준에 있으며, 중위임금의 1/2 미만인 초저임금자 또한 임금근로자의 1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2002에 비해 임금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과 기업복지 수혜율은 2002년에 비해 증가한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보험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 대입을 위해서라도 사회보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두 시기로 나누어 저임금 고용가능성을 본 회귀분석의 결과 2002년에서 2011년 사이 남성의 저임금 고용의 가능성은 증가했다. 정규상용직에 비해 비정규상용직, 비정규임시직, 비정규일용직의 저임금 고용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20대~40대의 저임금 고용가능성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저임금 고용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의 효과를 본 2007년에서 2011년의 시기를 보면, 앞서 본 분석과 마찬가지로 남성과 비정규상용직, 비정규임시직, 비정규일용직의 저임금 고용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2002년의 변화와 다르게 정규임시직의 저임금 고용가능성이 높아진 특징이 보인다. 또 20대 청년의 저임금 고용의 가능성이 증가한 반면, 다른 연령은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 구조가 변화하고, 사회보험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현실에서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OECD에서 공식적으로 회원국에 권고하는 고용정책 패키지의 하나이다.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을 확장해 정확한 정책을 대입하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11]

<참고문헌>

- 이병희(2008), 「저임금 노동시장의 실태와 동태적 변화」, 『동향과 전망』 73.
 반정호(2011), 「노동력의 연령구조 변화와 임금불평등」, 『노동리뷰』 3월호.
 윤진호·이시균(2009), 「한국의 저임금 고용의 결정요인과 이동성」, 『경제발전연구』 15(1).